



[산업] 구광모 LG회장 마곡 사이언스파크서 올해 첫 대외행보 05



Economy

코스피	2225.85 (+24.37)	코스닥	742.27 (+2.36)
금리 (국고채 3년)	1.79 (-0.01)	환율 (USD:100)	1125.10 (+3.40) (14일)

'T세포로 암 공격' 유전자치료제, 바이오 '새 지평'

<면역>

FDA "매년 10~20개 면역항암 신약 치료제 승인"



자영업·소상공인 만남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뉴시스

LG U+, CJ헬로 인수 유료방송 2위로 우뚝

8000억에 '50%+1주' 확보

케이블TV 1위 업체 CJ헬로가 LG유플러스에 안긴다. 인수 가격은 8000억원 수준이다.

LG유플러스는 14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CJ ENM이 보유한 케이블TV업체 CJ헬로 지분을 인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CJ ENM이 보유하고 있는 CJ헬로 지분 53.92% 중 CJ헬로 지분 절반(50% 지분에 1주 추가) 이상을 8000억원에 인수하는 조건이다. <관련기사 4면>

LG유플러스는 이날 이사회에 이어 CJ ENM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각 후 CJ ENM의 CJ헬로 지분율은 3.9%가 된다. 지분 50%에 1주를 추가로 획득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과반을 확보했다는 평가 나온다.

이후 LG유플러스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정부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인허가를 득하면 CJ헬로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지난해 4·4분기 기준, CJ헬로는 420만여명의 케이블TV 가입자와 78만여명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79만여명의 알뜰폰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인수를 통해 가입자 376만명을 보유한 LG유플러스는 단숨에 789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KT그룹에 이어



유료방송 2위 사업자로 부상하게 된다.

CJ ENM 관계자는 "방송통신 시장의 트렌드가 M&A를 통한 대형화, 글로벌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플랫폼 강화로 변화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분 인수와 시너지 발굴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5세대(5G) 시대를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방송서비스와 5G를 기반으로 가상·증강현실(VR·AR) 서비스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서비스를 접목한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통신 산업 관련 다양한 사업자와의 상생협업을 지속해 선순환적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보편성, 다양성, 지역성 등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인 기자 silkni@

#지난 1월 다국적제약사인 BMS가 항암제를 개발하는 셀진(Celgene)을 인수했다. 인수금액은 무려 832조원(740억 달러). 인수발표 전 추가 대비 54%의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이다. BMS가 무리하다고 여길 만큼 과감한 투자를 이유는 면역항암제인 CAR-T(카티) 기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셀진은 지난 2018년 1월 CAR-T 치료제 개발 기업인 주노(Juno) 테라퓨틱스를 10조원(90억 달러)에 인수해, 현재 세계 3번째 CAR-T 치료제 후보 물질인 JCAR017과 bb2121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임상2상 이상 시험진행 중인 유전자 치료제>

치료제	타깃 질환	제조사
VM202	중증하지혈질환, 당뇨병성 신경병증	바이로메드
티슈진-C	퇴행성 관절염	코오롱생명과학
VM106	만성 육아종	바이오메드
HB-110	만성 B형 간염	제넥신
세라젠	전립선암	뉴젠팜
JX-594	간암	녹십자/제너렉스/신라젠
VM206	유방암	바이로메드
VGX-3100	자궁경부암	이노비오
GX-188E	자궁경부암	제넥신

/현대차증권

美 다국적제약사 BMS 832조원에 '셀진' 인수를 제약·바이오 핫이슈

정부 '첨단법' 제정 추진 바이오메드, 코오롱 등 국내 바이오사 수혜 기대

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 미국에서 승인된 유전자 치료제는 총 4개다. 2015년 흑색종 치료제인 암젠의 임리직(Imlygic)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노바티스의 '캄리아(Kymriah)'와 길리어드의 '에스카타(Yescarta)' 등 면역항암제 카티(CAR-T)가 승인을 받으며 암 치료제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켰다. CAR-T 치료제는 체내에 있는 면역세포인 T세포를 활성화 해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유전자 치료제로 미국에서 허가된 유전자 치료제 4개 품목중 2개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크다.

글로벌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지난 2016년 5억8000만 달러에서 오는 2023년 44억 달러(약 5조 원) 까지 연평균 28.7% 성장할 것 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한금융투자는 FDA가 올해 발간할 주요 가이드라인은 ▲유전자 치료제 품목들의 상업화를 앞 당기기 위해 기존 FDA의 신속 승인 제도 ▲선천성 혈액 질환 및 퇴행성 뇌질환 등 특정 질환군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 개발 가이드라인 ▲CAR-T 치료제 등 생산 과정이 매우 복잡하여 개발이 어려운 세포 기반 유전자 치료제의 생산 효율화 등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김지하 연구원은 "모든 가이드라인은 유전자 치료제 개발 촉진을 목표로 만들어질 것이기에 FDA의 가이드라인 발간 계획만으로도 관련 업체들에게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첨단법' 통과, 허가 앞당긴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이 추진 중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일 '2019년 보건복지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에 대한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첨단법 제정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첨단법은 유전자·세포 치료제를 포함한 첨단바이오 의약품의 특성을 반영한 신속 허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안된 법안으로 지난해 8월 발의됐다.

첨단법이 통과되면 국내 유전자 치료제를 보유한 업체들에는 큰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중 바이오메드의 당뇨병성 신경병증(DPN) 치료제 VM202의 첫번째 미국 임상 3상을 완료한다. 바이오메드는 오는 7월께 첫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VM202는 지난해 FDA로부터 재생의학적치료제(RMAT)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승인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은다. 신라젠이 보유한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 펙사백도 올해 상반기 무용성 평가 결과 발표를 할 예정이다. 펙사백은 현재 글로벌 임상 3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코오롱티슈진이 보유한 세계 첫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도 미국에서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제약회사 먼디파마와 인보사의 일본 진출을 위한 6700억원 규모 기술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세경 기자 selee@metroseoul.co.kr

겉도는 소액연체구제... 까다로운 심사에 7.2%만 신청

재산·소득심사 등 거쳐야 제출서류 복잡해 포기도 통과 된 채무자 1% 수준



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채무를 감면(최대 원금의 90%)하고 추심을 중단하는 제도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기소액연체채무조정 신청건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총 8만6696명이다. 앞서 정부는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채주가 상당수 있다고 판단해 접수기간을 2018년 2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6개월)에서 2018년 9월 3일부터 2019년 2월 28일(6개월)까지 한차례 연장했다. 그러나 제도가 처음 시행된 기간에 6만5339명이 지원한 반

정부가 자기소액연체채무를 구제하기 위해 채무조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청 기준과 제출서류가 까다로워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음에도 자기소액연체채 119만명 가운데 신청자수는 8만6000여명에 그쳐 신청률이 7.2%에 머물렀다. 일각에선 자기소액연체채를 위해 마련한 제도가 채무면제가 절실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자기소액연체채 채무조정은 생계형 소액채무(1000만원 이하)를 오랫동안(10년 이상) 갚지 못한 사람 중 재기 의지는 있지만 상

면 연장된 3개월 간 지원건수는 2만 1357명에 그쳤다. 당초 자기소액연체채가 119만명으로 집계됐던 것과 비교하면 신청자가 7.2%에 불과하다.

문제는 저조한 신청자만큼이나 심사를 통과해 채무를 면제받는 것도 어렵다는 것. 자기소액연체채지원제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7월 9일까지 접수한 채무자 3만 1000명 가운데 심사를 통과해 채무를 면제받은 사람은 1만 2000명이었다. 전체 자기소액연체채자의 1%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지원기준이 까다로워 지레 신청을 포기하는 연체자도 많다고 지적한다. 채무관리카페에서 채무상담을 하고 있는 정세희(32)씨는 "홍보자료에는 단순하게 10년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소액연체채자를 돕는다고 명

시돼 있지만 자세히 보면 재산심사와 소득심사도 모두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1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받기 위해선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서류가 복잡하다 보니 미리 포기하고 신청하지 않는 연체자도 많다"고 말했다. 현재 제출 서류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지방세과세증명, 건보료납부증명, 국민연금납부증명, 예금잔액증명, 신용카드사용내역,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이다. 지난 8월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2%가 제출서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